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 김 인 중

서기관 : 박 선 우

전 화 : 500-1617, 1618

쪽 수 : 16 쪽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7일 17: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 ◇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 ◇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 목표로 총력 대응
- ◇ 10만 정예인력 양성,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12 27(월) 16:00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였음

□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i)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ii) 성장동력 확충, iii)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보고하였음

○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주제로 민·관합동 심층 토론을 실시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 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쌀 수급안정)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 농식품 수출 확대, '11년 76억불 달성 추진 ('12년 100억불)

- '11년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수출 목표 76억불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농식품 수출 : ('07) 37.5억불 → ('09) 48.1 → ('10) 60 내외

-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차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14년 완공을 위해 '11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민·관 협력 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3. 정예인력 10만명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 추진

-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고,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법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마을단위에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장 활력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할 계획임
- 이상의 3개 과제를 포함한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11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제 1 | 가축질병 대응 강화

□ 농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 추진 중)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 의무화, 미 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5일) 준수 등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질병 전파 방지,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 상인 가축 거래 금지(축산법 개정)

□ 축산농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강화 추진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시 신고와,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발생국 여행후 질병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
- 법 개정 전까지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지자체 가축방역관 예찰·검사 및 초기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 추진
-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 현장 투입

과제 2 |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관측기능 강화 및 위기대응 체계 조성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

- 시세예측 추가 등 농업관측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대책과 연계
 - 심각한 공급부족 전망 시 추가면적 확보, 해외 계약재배 등 추진
 - 관측 발간주기 개선 : (현행) 월1회 → (개선) 기상 급변기(7~10월) 수시발행
- 채소류 **계약재배 내실화** 및 양념류·수산물 비축규모 확대
 - 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 (현행) 소비량의 10% → ('11년) 15%(배추·무 20%)
 - 비축 : 양념류 수요량의 5%(현행 3%), 수산물 1%(현행 0.5%)로 확대
- 가격 급등락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대**(최근 5년간 가격 변동율 기준)를 설정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별로 대응

□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거래방식 다양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산지농협은 계약재배·상품화에 집중, 농협중앙회는 판매기능 강화
-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정산조직 신설 및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 배추 하차경매제 시범도입 및 IT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B2B 활성화, 정례 직거래장터 확충

□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및 실효적 수단 강화

- '농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신설 검토 및 공정위와 협조체계 강화
- 생산자 교육,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산지대응력 강화

과제 3 |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15년까지 70만ha 수준까지 축소
 - * 벼 재배면적(밥쌀/전체)(천ha) : ('10) 856 / 892 → ('11) 808 / 844
- '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을 재배하여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감축
 - * 타 작물 재배(40천ha) : 조사료 10천ha, 콩 8, 채소등 17, 다년생작물 5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2011년에 마무리하여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 쌀 MMA 물량(천톤) : ('11) 348 → ('12) 368 → ('13) 388 → ('14) 409
- 현재 쌀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년에 일본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육성
 -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5대 분야 55개 과제 R&D 지원
 - * 5대분야 핵심과제 : 기능성·가공용 품종(12종), 쌀제품 가공기술(15종), 가공기기(8종),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8종), 가공제품 품질제고(12종)
 - 쌀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구축
 - (1단계) 가공업체에 정부 쌀을 3년간 할인 공급('11년 38만톤)
 - (2단계)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 ('11) 1천ha → ('15) 30천ha
- 산지유통주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 쌀 대표가격 형성을 위한 사이버 거래 활성화
 - RPC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 유형화하고 차등지원
 -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 수급조절기능 강화

과제 4 |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 웹기반 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개선
 - * 농업기상정보 : ('10) 월 2회, 문서서비스 → ('11) 월 3회, 웹서비스
 - 작물재배지 복상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 작물 주산단지 변동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최적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추진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 신종재해 출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6월)
 - 폭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고, 최근('10.1~4월) 발생한 일조량 부족 피해를 명문화
- 노후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체계 구축
 - 노후어선의 선체 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주요 고장부위인 기관의 검사 및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시험 강화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범위 확대(어선법 개정)
-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강구
 -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감시인력 3만명 운영, 감시 카메라 등 장비 확충 및 헬기 진화역량 강화
 - (병해충) '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및 외래해충 예찰 강화
 - (산사태) 재해취약지역의 사망사업을 통해 수해피해 예방

과제 5 | 농식품 분야 R&D 개편

□ 방향성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총괄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전년대비 11.2% 증가)하고 농정현안, 미래수요, 국가기반 연구 등 방향성 있는 R&D 투자

※ ('10) 7,752억원(농식품부 2,377, 양청 5,375) → ('11) 8,623억원(2,797, 5,826)

○ 다부처 대형 R&D사업 공동기획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청 공동기획단” 구성

※ Golden Seed 프로젝트(부·청), 생명자원소재산업화-이어달리기(교과부·농진청), 바이오정보산업(국과위, 지경부·복지부), 지능형환경관리(국과위, 4개부처) 등

□ 농림수산물식품분야 R&D 총괄·조정(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자문기구 → 심의기구)

○ 부·청, 산하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등 추진체계 개편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우수기술보유 기업에 신용보증 및 저리 융자지원 도입(12년 시행)

○ 민간 R&D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대행 조직을 육성하고 현장우수기술을 발굴·지원(10억원) 추진

※ CRO(연구)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예) 네덜란드 Key Gene사: 분자마커개발 등 대행

※ CMO(생산)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과제 6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기능성식품, 식품소재산업 집중 육성 및 김치, 우리 술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촉진

○ 건강기능성식품 인정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확대, 식품소재 연구개발 강화 등을 통해 수입소재의 국산화 대체 강구

○ 술과 천일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김치 품질 표준화 및 맞춤형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상품 김치 소비 확대

□ 식품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 식품외식융합자금('11년, 700억) 신설로 시설자금 등 저리 융자지원,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 운영으로 컨설팅·기술지도 등 지원 강화

□ 식품종사 인력의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식품 제조·가공, 품질·위생관리 등 교육을 수행하는 식품 산업 인력양성기관 지정

□ 북미, 동아시아 중심으로 한식세계화 집중 추진

○ 고품격 한식전파를 위해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미국)

○ 국제한식조리학교 육성 및 외식기업 해외인턴제도 도입(200명)을 통해 한식세계화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 내년 농식품 수출목표는 올해 보다 27% 증가한 76억불로 설정

○ 해외 수출전진기지(중국 청도) 및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건설(부산) 추진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확대

※ 수출실적·목표 : ('09) 48억불 → ('10) 60 내외 → ('11) 76 → ('12) 100

과제 7 | 해외 농림어업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

□ 민간 중심 농림수산자원 개발과 ODA를 연계하여 상생적 개발효과 제고

○ (농업)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및 개발 대상국가 확대

- 예산 : ('09) 240억원 → ('10) 240억원 → ('11) 320억원
- 진출(누계) : ('09) 5개국 10기업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
- 정부간 사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추진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1.3 완료)와 연계 추진
- 아세안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FAO, 게이트 재단 등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 (수산) 자원 외교 강화 및 해외어장 개발 확대

-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 조업쿼터 확보 및 중국과의 어업협상으로 불법어업 최소화
-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협력사업, 나우루협정 당사국(PNA)인 솔로몬에 어항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 (산림)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 대상국 확대 추진

- 진출지역 및 자원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93부터 '10년까지 228천ha 해외조림 추진(11개국 21개 기업)
- AFoCO 설립을 위한 회원국 MOU 체결 및 인력양성 등 추진
-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10월)

□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수원국 정책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 농림수산분야 ODA 전문가 Pool 및 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과제 8 | 수산/산림 자원 개발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 (연근해)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11년 : 300척, 43억원) 및 어린고기 탈출 장치 개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어구 개발·보급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6월), 합리적·효과적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도입 추진
-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정착
 - TAC(총허용어획량제도) 대상 어종(11개)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추진하고,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 '11년까지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어촌계 비율 46%로 확대('10년, 38%)

□ (양식) 외해·갯벌양식 등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

- 외해양식가두리 확대 개발 및 참다랑어 완전양식 5개년('10~14) 계획 추진
- 갯벌의 생산성과 정화능력을 활용,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 참굴과 해삼 양식(4개소, 25ha)
-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2월)

□ (원양) 해외 신어장 개발 및 원양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

- 해외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어장 자원 조사(2개소)
- 원양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총조사 실시(4~11월), 해외 수산 투자 관련 정보기반 구축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확대 >

□ 녹화수종과 불량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 리기다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생장이 빠르며 가치가 높은 **백합나무, 소나무** 등으로 **갱신**(16년까지 리기다소나무림 180천ha 갱신 완료)
- 불량 천연림은 지역별로 소나무, 낙엽송 등 중점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용재가치가 우수한 **침엽수 인공림**으로 전환

□ 경제림육성단지를 항구적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전국 292만ha(450개 단지)의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우량목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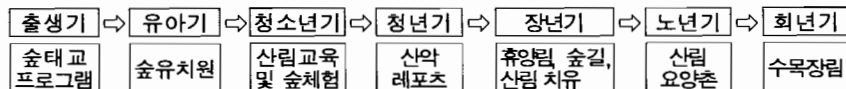
□ 숲가꾸기에서 산물수집, 이용에 이르기까지 **일관시스템** 구축

- 숲가꾸기 규모화(10ha), 기계화(작업능력 5배) 및 간벌률(20→35%) 제고로 산물수집을 확대('10년 110만m³→'11년 130만m³)

□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 확대

- 기존 농가주택, 시설원에 보일러 위주에서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산업체 등으로 **수요 다변화**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보일러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신뢰 확보

□ 전생애 걸쳐 산림혜택을 제공하는 **생애주기 산림복지** 도입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13개 사업에서 **4만5천명**을 고용

과제 9 |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

◇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 도모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 변화를 주도

○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교육

○ 정예인력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활성화 등

□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활력을 증진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가칭)“농어촌 활력화 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 국민운동 전개

○ 농어촌의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 농어촌의 활력있고 희망찬 분위기 확산

○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 잘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우수 마을을 선정,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과제 10 |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역(逆)모기지론) 제도 시행
 - 70세 농업인이 2억원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11까지 582)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 영농교육(1,000명), 정착지원교육(1,100명)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10일 이상 입원 → 5일 이상
-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8,230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 지원 추진

-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공동체 활성화(1,100개소)를 통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도모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공동체회사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월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우수 공동체회사 사업을 선정(54개소)·지원(개소당 50백만원)

과제 11 |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 농어업 보조금 지원의 기본원칙 마련 추진

- 농어가 유형에 따라 산업적 지원과 복지적 지원으로 차별화
 - 농어가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장기 융자 지원 / 소규모 : 복지 지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5개를 추가로 결성하여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추진('11 : 500억원)

- 투자분야는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자 비율 및 규모 등 설정

□ 간척지를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 농업 및 수출전문단지로 조성

- 미처분 간척지(34천ha)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활용방안 마련(3월)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2월 임시국회)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
- 농협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족자본금, 세제 등 지원
- 중앙회 경제부문 조직 개편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 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 유관기관별 중점 점검 사항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점검·개선방안 마련

-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 상황,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조직·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